

㉠ 국·공립대학 강사로 지급 규정 폐지

교육부는 9월 17일 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강사로 집행을 세입세출 예산과 연계시키도록 했던 '국·공립대학 강사로 지급규정'을 지난달 29일부터 폐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규정대로 최저선의 강사료만을 지급해왔던 대학은 강사료를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출 예산집행지침과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융통성 있게 집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선 대학의 경우 그동안 보통강의·특별강의·초과강의·시간강의 등을 구분한 기존 규정에 따라 강사료 지급을 차등화하여 강사 선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규정의 폐지로 강사료 지급단가의 현실화가 이뤄져 대학의 교원확보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또 그동안 계절제 강의의 경우 시간강사료의 4분의 1에 불과했던 초과 강사료를 현실화하고, 전임교원의 경우 주당 책임 수업시간이 10시간에서 9시간으로 줄어 강사 위축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 대학등록금 인터넷 납부 계획 발표

교육부는 다음 학기부터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인터넷 홈뱅킹이나 PC뱅킹, 폰뱅킹 등을 통해서도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홈뱅킹이나 PC뱅킹을 이용하여 등록금을 내려면 학생, 학부모는 대학이 지정한 수납 금융기관에 가서 이 서비스에 가입한 뒤 컴퓨터로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화면 메뉴에 따라 클릭하면서 대학코드와 통장계좌번호, 비밀번호, 학번, 성명, 금액을 차례로 입력하면 된다.

폰뱅킹을 활용할 경우 지정은행 폰뱅킹센터에 전화를 걸어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하면 자동 납부 처리가 된다.

이 제도가 일반화 되면 매년 대학입시 때마다 복수 합격한 신입생들이 등록금을 환불받기 위해 몇차례 은행을 오가야 하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 한·일 국비로 일본 공과대 유학

교육부 문용린 장관과 일본 나카소네 히로후미 문무상의 합의에 따라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인 일본의 공과대 유학 인원 규모는 다음과 같다.

연도	인원	연도	인원
2000	100	2006	200
2001	115	2007	200
2002	130	2008	200
2003	145	2009	200
2004	160	2010	200
2005	185		

유학희망자가 필기시험을 통과하면 국제교육진흥원과 주한일본대사관이 공동으로 실시하는 면접(인성·유학목적·수학계획·졸업후 계획)을 거쳐 최종 유학생을 선발한다. 이들은 1년간 예비교육(국내 6개월·일본 국공립대 6개월)과 4년 간 현지 유학 등 총 5년이 소요된다. 예비교육 과정이 끝날 때 유학생들은 대학 배치고사를 받아야 하며, 배치고사 성적과 본인의 희망에 따라 유학할 대학이 결정된다.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학생들은 국제교육진흥원에서 병역 연기 조치를 해준다.

이들 유학생들은 왕복항공권, 학비(4년), 어학연수비, 생활비, 대학졸업예정자 연구 경비 등이 무료이다. 한·일 양국이 50%씩 유학 비용을 대며, 유학하는 대학으로 송금해준다.

㉠ 평생교육센터 발족

교육부는 지난 3월 13일 평생교육법시행령이 공포된

데 이어 3월 29일에는 한국교육개발원 내에 평생교육센터를 개소하였다.

그간 교육부에서 4년 여에 걸쳐 추진하여 금년 3월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평생교육법'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국가 수준의 평생교육센터, 지역 수준의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와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에 대한 연구,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 및 평생교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난 2월에 동 센터의 주관기관으로 한국교육개발원이 지정되었다.

평생교육센터는 구체적으로 평생교육정책연구, 평생교육기관 실태 조사·분석, 평생교육 전문과정 및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구사업과 평생교육사 양성 및 재교육,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전문 연수교육, 전문 연수기관과의 협동과정 운영 등 평생교육 전문인력 개발사업, 평생교육 정보 제공의 중앙센터 기능, 전국 평생교육기관의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망 구축, 평생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강사정보은행제 및 교육계좌제의 도입·운영 등의 정보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평생교육센터는 금년도에 우선적으로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지원, 평생교육기관 네트워크 및 DB 구축, 강사정보은행제 시스템 개발 및 DB 구축사업과 관련한 기초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센터 발족 첫해인 금년도에는 예산이나 인력의 제약으로 활발한 사업수행이 어려우므로, 관련 분야 연구 수행 및 제도 보안을 통해 센터 업무의 본격화를 위한 대비에 치중하고,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충하여 실질적인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지난 3월 31일자로 평생교육법 시행규칙(교육부령 제765호)을 발표하였다.

### 교육정보 검색 인터넷 서비스 개시

교육부는 교육정보화 사업의 하나로 전국에 산재한 다양한 교육관련 정보나 자료의 소재를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교육정보 소재 안내시스템'을 개발, 3일부터 교육부 홈페이지(<http://www.moe.kr>)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서비스는 교육부, 시·도 교육청,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단행본과 연구보고서 등 교육자료 3천여 권과 지금까지 발간된 초·중·고교 교과서 1만 3천8백여 권의 소재를 안내해 주고 동시에 곧바로 해당기관에 연결(링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에 따라 학창시절에 배운 교과서나 논문작성을 위한 참고서적을 찾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 없게 됐다.

교육부 김준형 교육정보화담당관은 '교육정보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개발했다'며 '검색된 정보나 자료를 갖고 있는 기관을 찾아가면 언제든지 해당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전국 대학 교육기회 분석' 자료 발표

교육부가 4월 5일 발표한 '전국 대학 교육기회 분석' 자료에 따르면 1999년 현재 4년제 및 전문대 총 입학정원은 65만 3천8백25명으로 전국의 고3 학생수 77만 3천1백22명의 84.6%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경북 등 8개 시·도에 소재한 대학들의 입학정원은 해당 지역 내 고3 학생 수보다 오히려 많아 일부 지방대의 정원미달 사태가 '수험생들의 수도권대학 선호 현상'이나 '지방대 졸업생의 낮은 취업률' 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분석됐다.

경북의 경우 대학 총 입학정원은 6만 4천5백50명으로 지역 내 고3 수험생 수 4만 6천5백68명의 1.4배나 된다. 충남도 입학정원(4만 3천2백15명)이 고3 학생 수

(3만1천8백82명)의 1.36배다. 대전(132%), 광주(119%), 충북(115%), 강원(113%), 전북(104%), 제주(103%) 등에 소재한 대학들도 총 입학정원이 고3 수험생 수를 웃돌았다. (아래표 참조)

사도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교육기회

지 역	고3 학생수	고3 대비 4년제 대학 입학정원(%)	고3 대비 전체대학 입학정원(%)
서울	176,697	50.1	61.4
부산	71,354	45.8	82.0
대구	45,405	22.4	65.4
인천	37,764	17.0	47.1
광주	25,860	67.1	118.9
대전	24,625	80.5	131.6
목산	16,411	18.3	34.0
경기	114,954	24.2	82.4
강원	26,113	69.2	112.9
충북	24,195	70.1	115.0
충남	31,882	95.4	135.5
전북	35,593	63.6	103.6
전남	37,424	35.3	79.2
경북	46,568	67.9	138.6
경남	49,303	36.4	71.0
제주	8,974	35.2	102.9
총계	773,122	46.5	84.6

이 같은 현상은 교육부가 대학설립인가제를 폐지하면서 설립기준만 갖추면 누구나 대학을 세울 수 있도록 한 '96년 이후 지방대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된 때문이다. 실제로 '96년 이후 4년제 대학 27개대, 전문대 12개대가 각각 설립됐다. 또 2003년에는 고졸예정자가 64만 5천여 명으로 줄어드는 반면 대학 및 전문대 입학정원은 72만 6천여 명으로 늘어나 적지 않은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대학설립 및 운영기준을 대폭 강화, 이를 밀도는 대학은 해체시키는 한편 원하는 대학에 대해서는 평생교육 및 재교육기관으로 전환시키는 방안

을 강구중이다.

### ☞ 2001학년도 대학원 학생 정원조정 기본계획 발표

교육부는 4월 9일 '대학원 정책과 2001학년도 학생 정원조정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대학교별로 총정원 범위 내에서 학과 신증설 및 폐지를 자유롭게 하여 대학별 특성화를 유도하고, 대학원 정원증원에 있어서 기본 요건인 교원 확보 등 교육여건에 관한 기준을 과거 실적기준에서 2001년 3월 1일 이전까지 각 대학이 확보할 교육여건 확보 계획기준으로 바꾸어 교수충원을 장려하기로 하였다. 특히,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 진전에 따라 정보통신, 사이버무역, 전자상거래(e-business), 생명공학, 문화산업 등 첨단 분야에 대한 인력수요가 급증하고, 해외에서 MBA시장이 폭증하는 점을 감안하여 첨단 학문분야에 대한 대학원 정원 증원을 권장하고, 관련분야 전문직 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원 신설을 적극 장려하여 본격적인 전문대학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전문대학원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동일 전공의 일반대학원 석사과정과 특수대학원이 있는 경우 이를 폐지하는 것을 전제로 전문대학원을 개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수대학원의 경우에는 직장인의 재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평생교육체계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사이버 대학원 설치를 장려하는 등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할 경우 대학원 신설을 포함하는 정원조정을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번 정원조정 기본계획에서 주목할 것으로서 의과대학원에서 임상적 지식과 과학적 연구·실험기법을 두루 겸비한 의과학자의 양성을 위해 그동안 일부 의과대학이 개설을 추진해 온 복합학위(M.D-Ph.D)과정을 시범 도입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있는 건축학 교육을 위해 건축전문대학원 체계를 대학 자율로 구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건축학과 5년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이후 가능).

교육부는 2000년 5월 31일(수)까지 대학자체 정원조정 계획을 접수받아 2000년 6월 30일(금)까지 각 대학에 총괄인원으로 정원을 배정하고,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학적으로 대학 내 세부정원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 2001학년도 대학입학 정원 조정지침 발표

국·공립대와 수도권 대학의 2001학년도 신입생 입학 정원이 동결된다. 또 의예·치의예·한의예·약학·한의학 등 의대도 현 정원이 유지된다. 그러나 지방 사립대는 교원과 교사확보율이 60% 이상일 경우 대학이 마음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정원조정권을 완전 일임키로 했다.

교육부는 4월 7일 이를 골자로 한 2001학년도 대학 신입생 정원조정지침을 발표, 5월 13일까지 각 대학의 정원조정계획을 받아 6월말까지 대학별 정원을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공립대와 수도권 소재 사립대의 경우 총 정원을 동결하되,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학교가 있을 경우 그 감축정원 범위 내에서 대학 특성화나 국가 우선적으로 필요로 하는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4년제 정원 31만 4,410명 가운데 국·공립대 정원은 6만 4,179명, 수도권 소재 사립대는 11만 6,095명이다.

교육부는 또 총 정원 범위 내에서 전공 신·증설 및 폐지, 통폐합, 단과대 개편, 모집단위별 정원 조정 등 자체 조정을 전면 허용키로 했다.

### ㉸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 제정

그 동안 교육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인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안'이 4월 6일 차관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종전 총리훈령이었던 '교원에우에 관한 지침'을 대통령령으로 격상하여 '교원에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한 것으로서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을 받으며,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원에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그 실효성을 강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그 주요 내용은 종래 총리훈령인 '교원에우에 관한 지침'과 UNESCO/ILO의 '교원지위에 관한 권고'를 기본으로 하여 교총 등 교직단체와 학부모단체 등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 반영 및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다.

### ㉸ 2002학년도 수능성적 표기방식 개편 계획 발표

200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부터 수능 총점과 총점에 따른 석차 백분위 점수가 폐지되고, 수험생들의 성적을 9개 등급으로 나누는 등급제가 도입된다. 또 2001학년도까지 적용되는 수능성적표의 소수점 표기방식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수능성적은 수험생들이 대학을 지원하는 자격 기준으로 활용하거나 영역별 성적만을 반영해 총점이 합격·불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4월 19일 이 같은 내용의 '2002학년도 수능성적 표기 방식 개편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등급제는 계열별 변환표준점수를 기준으로 하며 ▶1등급 상위 4% ▶2등급 상위 7% ▶3등급 12% ▶4등급 17% ▶5등급 20% ▶6등급 17% ▶7등급 12% ▶8등급 7% ▶9등급 4%로 나뉜다.

또 수능성적 발표 때 영역별 원점수와 변환표준점수의 소수점(첫째자리까지 표시)이 폐지되고 영역별 석차 백분위 점수의 소수점(둘째자리까지 표시)도 없어진다.

이에 따라 대학입시에서 수능 총점과 학생부 성적 등을 일괄적으로 합산, 1점 이하의 소수점에서도 합격·불합격이 갈리던 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 ☪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마련

교육부는 4월 26일 교수자격 심사권을 각 대학 인사위원회 등 총·학장에게 넘기는 것 등을 토대로 한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는 대로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대학 전공학과를 따지던 규정을 없애고 교육부에 두던 교수자격심사위원회를 폐지해 앞으로는 각 대학 자율로 학위가 없어도 특정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 업적을 쌓은 전문가를 전임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교수 임용 때 1~3개월씩 걸리던 교육부 처리기간이 없어져 필요 교원을 바로 채용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1955년부터 지금까지 1,135명의 교수자격 심사를 신청받아 559명에게 교수자격을 줬으나 점점 줄어 '96년 이후에는 심사 대상자가 7명에 그쳤다. 교육부는 또 교수 신규채용 때 모집 전공분야와 임용 신청자의 학부 전공과 석·박사학위 및 실적·경력 등이 일치하도록 규제한 조항도 철폐했다. 따라서 모집분야가 학부 전공학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석·박사학위 및 연

구업적만 충족되면 임용에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됐다.

### ☪ SCI자료 분석 결과 발표

학문연구 수준을 나타내는 국제 과학논문 인용색인 지수(SCI)에서 서울대가 처음으로 세계 100위권에 드는 등 국내 대학의 연구능력이 점차 나아지고 있지만 세계 수준에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4월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세계 3,650종의 학술지를 대상으로 한 SCI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대는 '98년 한해 동안 1,671건의 논문을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올려 94위를 기록했다. '97년보다 논문건수는 19.8% 늘어나고 순위는 32위가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에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160위→155위, 연세대는 290위→249위, 포항공대는 387위→335위, 고려대는 426위→367위, 한양대는 473위→435위, 경북대는 569위→517위 등 국내 대학의 순위가 전체적으로 올랐다.

이에 따라 국가별 논문수를 합친 전체 순위가 17위에서 16위로 한단계 올랐지만 국내 7개 대학의 논문을 다 합쳐도 도쿄대 한 곳(5,751건)보다도 적다. 교육부는 2005년까지 연구수준을 10위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전체 순위에서 1위는 하버드대(8,182건)이고, 일본은 도쿄대 등 9개 대학이 100위권에 들었다. [한]